

“마지막 주말 표심 잡아라”...광주·전남도 총력 유세전

민주, 경청투어·거점 유세 지지 호소 국힘, 전남 동부권 순회 표몰이 집중 민노, 광주 문화사거리·무안읍서 유세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이틀 앞둔 1일 각 정당이 광주·전남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막판 총력전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주요 거점에서 골목 유세, 경청 투어, 투표 독려 운동 등 집중 유세 활동에 나섰다. 전남에는 지역별 집중 유세를 펼치며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당은 평소 진행해 온 ‘경청 투어’를 이어 가면서 지역별 거점 유세와 단체·직능별 활동에 역량을 집중했다. 좁길, 골목 유세, 차량 이동 유세, 순회 유세 등을 펼치며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를 부탁했다.

특히 대선 본 투표에 앞서 마지막 주말 유세인 점을 고려해 선거운동원들이 유권자와 접촉한 실적을 기록해 제출받는 방식으로 세부 관리에 나섰다.

민주당 전남선대위도 권역별로 나눠 마지막 집중 공략에 돌입했다. 지난달 31일에는 목포 평화광장에서, 1일에는 나주, 담양 등에서 유세를 펼쳤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2일에는 자전기 홍보단 50여명이 광주시청에서 출발해 5·18민주광장까지 약 10km 구간을 주회하며 투표 독려 운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남은 여수에서 집중 유세로 피날레를 장식할 계획이다.

양부남 민주당 광주선대위원장은 “마지막까지 기존 방식을 유지하며 지지와 투표 참여를 호소할 계획”이라며 “마지막 주말엔 지역별로 역량을 총동원한 유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막판 지지세 결집에 총력을 기울였다.

국민의힘 광주선대위는 지난달 31일 증심사·무등산 인문축제에서 연설을 펼쳤으며 매일동 농수

산물센터, 총장로, 동명동, 수완지구 국민은행사거리, 상무지구 등을 순회하며 집중 유세했다.

1일엔 우치공원 연설을 시작으로 일곡지구 국민은행 앞, 첨단쌍암공원, 첨단 엘시타워 부근, 풍금사거리 등에서 릴레이 유세전에 이어갔다.

전남선대위도 같은 날 동부권을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집중했다. 광양 오일장을 시작으로 보성 율포해수욕장, 담양 죽녹원 등에서 집중 유세를 벌였다.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선대위원장은 “지역 선거운동을 집중해 후보 지지세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중노동당 광주선대위는 지난달 31일 증심

사 입구, 품암동행정복지센터 사거리에서 유세 활동을 펼쳤으며 1일엔 각 구별 종교시설 입구, 북구 문화사거리에서 표심 잡기에 주력했다. 전남선대위도 무안을 일대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강은미 민주노동당 광주선대위원장은 “막판 주말 유세를 통해 일반 시민들에게 권영국 후보를 알리는 데 집중했다”며 “2일에는 흑석사거리에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막바지 총력전에 나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혁신당 광주시당은 대형 유세차를 활용해 주말과 휴일 동안 광주 시내 곳곳을 돌며 이준석 대선 후보 지지를 부탁했다. /연은·양시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내란전담 선거공작지대 단장을 맡은 정성호·박선원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댓글 조작 의혹을 받는 보수성향 단체 ‘리박스쿨’ 관련 국민의힘을 향해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리박스쿨’ 의혹에 “댓글 내란 사건”

“어린 학생 상대로 교육내란 시도 수사기관 즉각 수사해 뿌리뽑아야” 이재명 “국민의힘과 관련성 높아”

더불어민주당은 1일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의 댓글 여론 조작 의혹에 대해 “국헌 문란 댓글 내란 사건”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중앙당사에서 주재한 긴급 본부장단 회의에서 “불법으로 선거 결과를 조작하려는 이번 사건을 우리는 선거 부정 댓글 내란 사건이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윤 본부장은 “이번 사건은 이명박(MB) 정부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박근혜 정부 국정교과서 사태의 종횡판이라 할만한 심각한 충격적 사건”이라며 “수사기관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 추악한 범죄행위를 척추골근(줄기를 자르고 뿌리를 파낸다는 뜻)의 자세로 뿌리 뽑아야 한다”며 “당에도 진상조사 기구 설치를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의원은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극우 역사관을 주입하는 흉악하고 악질적인 교육 내란 시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교육부 내에 리박스쿨의 뒤를 봐주는 세력이 존재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겨냥해 “이 권한대행의 정책 자문관이 리박스쿨 대표를 장관 정책자문위원에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정조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여성본부장인 이수진 의원은 “이번 사건은 윤석열 내란 정권 차원에서 치밀하게 기획된 대규모 내란 세력 침투 작전이자 반인륜적 범죄이며 아동학대”라며 “아이들마저 내란의 도구로 삼는 그들의 존재 자체가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신현영 선대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리박스쿨에 자신의 머니리양메리씨가 강사로 있던 전광훈 목사는 물론, 늘봄학교 확대를 공약한 김문수 후보 역시 리박스쿨 게이트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전광훈-김문수-리박스쿨의 검은 관계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기본소득당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찰청을 방문해 댓글 조작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이재명 대선 후보도 지난달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 유세에서 “반란 행위가 아닌가.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댓글을 불법으로 달아 국민 여론을 조작하고 선거 결과를 뒤집어 보겠다는 중대범죄 집단이 ‘리박스쿨’이라고 한다. ‘리’는 리스판의 첫 글자, ‘박’은 박정희의 첫 글자가 아닐까 하는 합리적 추론을 했다”며 “이번 댓글 조작은 국정원이 하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거기서 늘봄학교 교사를 양성했다는데, 이상한 사람들을 교육시켜 어린이들 교육과 보육을 책임지도록 하면 좋은 것을 가르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게 그 사람들이 혼자 한 일이었나”라며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과 관련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아닌가. 국회의원이 들락날락했다는 얘기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할 때 같이 했다는 얘기도 있던 거 같아 더 파보면 나라가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어는 시대인데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만들고, 이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선거 결과를 망치려 하니”라며 “용서할 수 있겠나. 반드시 뿌리를 뽑아버리자”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62.57% 1위

광주·전남 국회의원 지역구별 사전투표율

이계호 담양·함평·영광·장성 2위 도시권보다 농어촌 투표율 높아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각 지역구별 투표율과 득표율 등 대선 ‘성적표’를 국회의원 평가에 반영하기로 하면서 지난달 29·30일 이틀간 실시된 사전투표율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일 민주당에 따르면 광주·전남 18명 국회의원의 지역구별 사전투표율을 분석한 결과, 전국에서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전남의 경우 문금주 의원의 지역구인 고흥·보성·장흥·강진 선거구인 1만4천973명 중 9만3천881명이 투표해 사전투

표율 62.57%로 1위 중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이계호 의원 지역구인 담양·함평·영광·장성으로 1만2천388명 중 9만5천166명이 참여해 62.45%를 기록했다. 1위 문금주 의원의 차이는 0.12%에 불과하다.

이 의원의 지역구 4개 군(郡) 중 담양은 최근 군수 보궐선거에서 조국혁신당에 털리며 잡혔지만 63.05%의 사전투표율로 집계돼 이 같은 추세가 본투표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3위는 박지원 의원 지역구인 해남·완도·진도로 전체 1만2천766명 중 61.65%인 7만5천622명이 투표를 마쳤다. 이어 서삼석 의원 지역구인 영암·무안·신안 58.49%, 신정훈 의원 지역구인 나주·화순은 58.08%였다. 가장 낮은 지역은 51.19%로 집계된 여수시(주철현·조계원)로 나타났다.

단일 사·군 지역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인

곳은 신안으로 65.61%였다. 이어 곡성·구례·장성·장흥이 64%대를 기록했으며 함평·담양은 63%로 뒤를 이었다.

광주의 경우 동구 55.07%, 서구 51.93%, 남구 55.06% 북구 53.06%, 광산구 48.07%를 기록했다. 전체 유권자 119만4천471명 중 6만2천587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광주 지역구는 ▲동구남구갑(정진욱) ▲동구남구을(안도걸) ▲서구갑(조인철) ▲서구을(양부남) ▲북구갑(정준호) ▲북구을(전진숙) ▲광산구갑(박군택) ▲광산구을(민형배)로 나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각 의원의 관할하는 행정동 별로 집계가 다소 달라질 수 있지만 대체로 대도시권인 광주가 농어촌 지역인 전남에 비해 사전투표율이 낮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진수 기자

이재명 여의도·김문수 서울시청서 피날레 유세

이준석, 서울 강남 노는 대구 검토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이 대선 투표일 하루 전인 2일 서울에서 ‘피날레 유세’를 하며 공식 선거 운동을 마무리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여의도공원을 마지막 유세지로 정했다. 12:30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를 이끈 국회의사당을 바라보면서다.

국민과 계엄을 극복한 ‘빛의 혁명’을 강조하는 의미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시민들이 응원봉을 들고 모았던 빛의 혁명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마지막 유세 일정을 알리며 “지난 겨울 민주주의의 위기를 막아내고 대한민국을 지켜낸 역사적 장소가 여의도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과 민주주의의 가치가 가장 빛났던 그 위대한 역사의 출발점에서 다시 한번 함께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서울시청 광장에서 피날레 유세를 한다. 윤 전 대통령도 지난 대선 마지막 유세를 같은 장소에서 한 바 있다.

김 후보는 마지막 날 제주 유세를 시작으로 서울까지 복상하는 ‘종단 유세’를 하며 지지세를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서울시청 앞은 대한민국과 서울의 중심이라는 의미가 있다”면서 “유동 인구가 많고 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넓은 현실적인 고려도 있었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서울 강남 노는 대구를 피날레 유세지로 검토 중이다.

서울 강남의 경우 이 후보가 내세우는 ‘젊음’을, 대구는 ‘보수의 적자’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고 개혁신당 관계자는 전했다. /연합뉴스



1일 서울 종로구 서울선거관리위원회에서 참관인들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내 사전투표함 보관소, 우편투표함 보관소 CCTV통합관제센터 화면을 열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관위원장 “사전투표 부실 관리 송구” 사과

“전국 선거 방해행위 심각하게 생각” “원인·책임 소재 밝힌 뒤 법적 절차”

노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은 지난달 31일 “지난 (대선) 사전투표 날(29·30일)에 있었던 투표 부실 관리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동대문구 성동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하며 “선거 절차가 마무리 되는 대로 문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혀서 엄정한 법적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신촌동 사전투표소 투표용지 반출 사태 등이 발생한 지난달 29일 김용빈 사무총장 명의의 “책임을 통감한다”고 공식 입장문을 낸 데 이어, 선관위원장이 나서서 다시 한번 사과한 것이다.

사전투표 기간 발생한 투표용지 반출, 배우자 대리투표 등과 관련해 중앙선관위의 부실한 관리 실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선관위원장이 직접 사과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노 위원장은 또 “많이 보도된 것처럼 지난 이틀 동안 전국적으로 선거 방해 행위가 있었다”며 “조직적인 것으로 보이는 투표함(투표 관리관) 등에 대한 협박, 폭행, 사무실 무단침입(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해 상해를 입은 직원,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은 직원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선관위는 이를 심각하게 생각한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관외 사전투표용지 회송 절차에 대한 현장 점검 차원에서 성동구선관위를 찾았다.

노 위원장은 “이제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와 함께 우체국을 통해서 유권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 투표소로 접수하게 된다”며 “정확한 숫자와 정당한 유권자가 맞는지 정확하게 점검하는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왔다”고 설명했다.

노 위원장은 “정당 참관인들도 함께 정확하고 안전하게 유권자가 행사한 투표권을 소중하게 관리하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투표용지) 이번 절차를 거쳐서 개표일까지 안전한 장소에 보관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